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5. 4.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전자 모니터링 · 와이파이, 해상 복지 · 환경 보호 기여..... 3
2. 중국, 불법어업 대응 위해 PSMA 비준... “구체적 조치” 4
3. 트럼프, 국제 분쟁 수역에서의 해저 채굴 허가 신속 추진 지시..... 5
4. 필리핀-중국 갈등 장기화, 불법어업 확산 우려 7
5. IUU 어업 대응 강화를 위한 미국 상원의 조치 9
6. 트럼프 수산물 행정명령에 대한 상반된 시각 10

- 더 네이처 컨서번시와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 롱라인 어선에 전자 모니터링과 Wi-Fi를 설치하면 선원 복지가 크게 향상되고, 작업 환경의 투명성도 높아졌음.

* 더 네이처 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 미국 기반 환경 옹호 단체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Conservation International): 미국의 비영리 환경보호단체

- 1년에 걸친 연구와 3척의 선박에서 6개월간 진행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전자 모니터링이 노동권 침해 감지, 안전 관리, 근무 조건 추적에 도움을 주며, Wi-Fi는 선원들이 가족과 연락하고, 고충을 신고하며, 급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입증되었음.
-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의 이점이 해양 보존을 넘어, 어업 관리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 검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또한 유해한 감시 위험성과 높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업계 전반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와 재정적 장벽 해소를 위한 강력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는 전자 모니터링과 Wi-Fi를 10척의 선박으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연구하며, 산업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노동권 보호와 확장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electronic-monitoring-and-wi-fi-promote-welfare-at-sea-report-says> ('25년 04월 22일 검색)

- 중국의 항만국조치협정(PSMA) 공식 비준은 불법 어업 근절과 해양자원 보호,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조치로, 중국 내 어업법 개정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
 - 중국은 2025년 1월 공식적으로 FAO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비준하며, 불법 어업 방지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줬음.
 - PSMA 가입으로 중국은 불법 어선의 항만 이용과 어획물 상륙을 차단함으로써, 해양자원 보호와 어업 관리의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게 됐음.
 - 이번 조치는 중국 수산업의 현대화와 어업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IUU 어업 근절과 더불어 양식업의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 저감 등 지속가능성 강화도 병행하고 있음.
 - 중국의 PSMA 가입은 세계 최대 어획국으로서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자, 국제 NGO 및 외부 압력에 대한 수용성 확대의 신호로 평가됨.

※ 출처: SeafoodSource²⁾

2)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hina-s-ratification-of-port-state-measures-agreement-marks-a-concrete-measure-in-battle-against-iuu> ('25년 04월 22일 검색)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원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법을 무시하고 미국과 국제 수역에서 해저 광물 채굴을 신속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에 대해 경제성과 환경 훼손, 국제적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 수역의 해저에서 다금속 괴(polymetallic nodules) 채취를 통한 광물 시추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그는 해당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해양 과학기술과 해저 광물 자원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힘
-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 티타늄, 희토류 원소 등 전략 광물 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 협력 및 기존 권한을 활용할 계획임
- 트럼프가 언급한 기존 권한은 1980년 제정된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에 기반하며, 해당 법은 NOAA를 통한 심해 탐사 및 채굴 허가를 규정함. 단, 지금까지 상업 채굴을 허가한 사례는 없음
- 국제 수역 해저 광물 채굴은 UN 해양법 협약(1994)에 따라 국제해저기구(ISA)가 관할하나, 미국은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
-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 규범과 충돌하며, 미국 경쟁력 및 자원 안보를 이유로 독자적 채굴을 정당화함
 - UC Santa Barbara의 Douglas McCauley 교수는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불리하며, 규제 없이 진행될 경우 중국이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라 경고하였으며 심해 채굴 경제성이 불확실하며, 채굴 비용이 지상 채굴 대비 매우 비쌀 것이라고 지적함
 - 투자회사 Caladan Capital의 CEO이자 잠수 탐험가인 Victor Vescovo도 심해 채굴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크며, 수익성은 낮다고 비판함
 - Vescovo는 현재 코발트와 니켈은 해저가 아닌 육상에서 더 저렴하게 확보 가능하며, 희토류도 해저에서는 의미 있는 양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 3월 말,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해저 채굴업체 The Metals Company(TMC)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여 국제 수역에서 채굴 승인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TMC 회장 Gerard Barron은 미국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했음을 밝힘
-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 Leticia Carvalho는 Barron 발표 직후, 법치주의와 다자 협력이 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비판 성명을 발표함
- 다수 ISA 회원국들도 환경 리스크와 공동 재산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함
 - Pew Charitable Trusts 해저 채굴 프로젝트 책임자 Julian Jackson은 해양 생태계, 수산업,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함
 - 코스타리카 대표 Gina Guillén-Grillo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심해 생물종까지도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명령은 TMC 등 민간 기업들이 상업적 해저 채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들에게 효율성, 예측 가능성, 경쟁력을 보장하도록 허가 절차를 신속화할 것을 지시함.
- TMC는 현재 하와이와 중앙아메리카 사이 5,000km에 걸친 Clarion-Clipperton Zone에서 탐사 허가를 보유 중임

※ 출처: SeafoodSource³⁾

³⁾<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trump-orders-noaa-to-expedite-permits-for-seabed-mining-in-disputed-international-waters>

-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해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어업(IUU)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어장 접근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서로를 위협 행위로 다시 비난함
 - 4월 14일, 중국 해경(CCG) 선박이 필리핀 해경선 BRP Cabra의 항로를 가로막으며 위협함. 사건은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발생.
 -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경이 필리핀 어민을 위축시키기 위해 불법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S) 위반을 비판함
 - 1주일 전에도 중국 해경 2척이 BRP Cabra를 고의로 충돌하려 시도했다고 필리핀 측은 보고함
 - 4월 20일에는 중국 해군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을 순찰 중이던 필리핀 해군 호위함 BRP Apolinario Mabini를 추격·대응함. 중국군은 필리핀 함정이 자국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
 -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 자오즈웨이 대령은 필리핀에 침범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모든 결과는 필리핀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함
 -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주장을 "악의적 허위정보"라고 반박함
 - 중국 군함·항공기와 필리핀 정부 선박 간의 충돌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
 - 이번 충돌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미-필리핀 합동 군사훈련 'Balikatan 2025' 직전에 발생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귀지아쿤은 미국과 필리핀의 대규모 합동훈련이 역내 전략적 안정성과 경제 전망을 해친다며 강하게 비판함

- 남중국해는 336만km² 이상에 걸쳐 있으며, 대만부터 말라카 해협까지 이어지는 해역으로, 영토 문제, 어업권, 에너지 접근권, 수산자원 감소 문제 등이 얽혀 있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모두 남중국해 어장 접근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싱크탱크 Stimson Center는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과 지역 간 분쟁이 불법어업(IUU Fishing)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함
- Stimson Center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의 스카버러 암초 점령과 스프래틀리 제도 내 인공섬 건설로 인해 근해 어장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산란지가 파괴되고 있음
- 남중국해 불법어업은 주변국들이 서로의 어장을 침범하고 어획량을 신고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며, 해양 경계 불명확성과 함께 선박 충돌, 침몰, 법적 분쟁, 해경 및 어선의 군사화까지 초래하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⁴⁾

⁴⁾<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ontinued-tensions-between-philippines-and-china-may-contribute-to-iuu-fishing>

- 미국 상원에서 불법, 미보고, 비규제(IUU)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음. 이 초당적 조치는 "중국 및 기타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IUU 어업을 억제하고 이러한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초국가적 범죄 활동을 담당하는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 버지니아)은 "IUU 어업은 인권 침해로 가득 차 있으며 해양 안보, 세계 경제, 버지니아의 수산물 산업에 해롭습니다"라고 말했음.
- 이 글로벌 어업 보호법은 대통령이 IUU 어업이나 멸종 위기종의 판매, 구매 또는 이전에 IUU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이나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 법안은 또한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우호국" 및 국제 포럼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국무부와 국방부가 IUU 어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도록 의회가 요구할 것임.
- 미국 남부 사령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선단에 의한 서반구에서의 IUU 어업으로 인해 연간 2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함.
- "중국은 매년 남미의 갈라파고스 및 기타 연안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근처에서 활동하는 약 200~600척의 원양 어선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종종 IUU 어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로라 리처드슨 장군이 작년 하원 군사위원회에 말했음.
-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재정적 비용에 그치지 않고 기회비용도 발생시킴. 국가들이 이러한 환경 및 경제 범죄에 맞서기 위해 다른 중요한 임무들에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불법 어업 관행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는 근면한 어민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성명에서 말했음. "이 초당적 법안은 공정성을 회복하고 글로벌 어업의 무결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출처: www.seafood.media⁵⁾

5)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4361&ndb=1> (4월 25일 기사)

- 어민들은 트럼프의 수산물 행정명령을 환영하는 반면, 환경 보호 단체들은 남획 발생을 두려워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상업 어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명령은 상업 어업 단체들의 찬사와 환경 단체들의 비난을 받았음.
 - 이 명령은 미국 해역 내 어업에 대한 연방 정책의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자원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보다 상업 어업의 이익을 우선시함.
 -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규제를 완화하고 이전에 보호된 지역에서 수확을 개방함으로써 미국 상업 어업을 개선하는 "쉬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수산물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해산물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환경 단체들은 매그너스-스티븐스 어업 보존 및 관리법의 중요성을 언급했음. 이 법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어업 관리를 규율해왔으며 남획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 연방 남획 목록에 포함된 어종 수는 2013년 40개에서 2023년 47개로 증가했으며, 환경 보호론자들은 규제가 약화되면 그 수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의 해양, 경제, 수산물 저녁 식사를 보호하는 바로 그 안전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고 환경 단체 오세아나 부사장인 베스 로웰은 말함.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과학 기반 어업 관리 접근 방식은 감소하는 어획량을 재건하였고 미국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했으며 중요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 한때 Maine주 새우와 대서양 대구의 수익성이 높았던 북동부를 비롯한 일부 어업 부문은 환경 변화와 남획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 일부 연어를 포함한 서해안 어종도 고갈되었음.

- 자원관리 성공도 있었음. 연방 정부는 작년에 대서양 연안 파란 농어와 워싱턴 연안의 코호 연어 자원을 과잉 어획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 어민들은 트럼프 행정명령 덕분에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함. 버지니아 국립 어업 연구소 소장 리사 월렌다 피카르는 이러한 변화는 미국 어부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는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 월렌다 피카르는 "행정명령은 열심히 일하는 어민부터 가정에서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을 가족에게 제공하는 부모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사람들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음.

출처: www.apnews.com⁶⁾

6) <https://apnews.com/article/trump-seafood-fishing-executive-order-pacific-14793f6b00adb48f9510dc9ed5c1a0f1>
(4월 19일 기사)